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기억과 참전의 악순환*

박태균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2003년 한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 한국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이라크에서 전개된 미국의 전쟁이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은 전투부대 파병에 반대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동년 10월 18일 한국 정부가 전투부대 파병을 결정하는 시점에서의 여론 조사에서는 이전과는 달리 파병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넘었고, 이는 파병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여론이 바뀐 것은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의 민주화와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한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지만, 이와 함께 이라크 파병을 통한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전쟁 특수’를 고려한 ‘국익’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적지 않았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라크 파병을 전후하여 베트남 파병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 다시 도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 파병과 이후 중동 진출을 통한 특수가 한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역사적 기억이 사회적으로 작동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본이 한국전쟁 기간 동안 경험했던 전쟁특수의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적 기억의 측면이었다.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과 일본 정부의 미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이러한 기억을 재생하도록 하였다. 실상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에 대한 기억은 이미 1960년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기간을 통해 재현된 적이 있었다. 결국 이렇게 전쟁과 파병에 대한 특정한 형태의 기억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 이미 한국 인들은 80년 전인 1931년의 만주사변으로부터 그 기억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한 방향으로의 기억은 동아시아에서 전쟁의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평화를 위해 잊혀져 있는 중요한 기억들의 재생이 필요하다.

주제어: 전쟁의 기억, 이라크 전쟁, 베트남 전쟁, 한국전쟁, 만주사변, 노무현 정부, 전쟁 특수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7). 이 논문의 일부는 2010년 11월 5일 동북아역사재단이 주최한 “아시아와 평화”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I. 이라크 전쟁과 베트남 기억의 재생

2003년 한국 정부는 이라크 전쟁에 한국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은 한국의 진보적 지식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이전의 정부에 비해 진보적 정부로 평가되고 있었으며,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었던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은 2005년 12월 30일,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많은 발행부수를 기록하고 있는 『조선일보』에는 노무현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칼럼이 게재되었다. 박정희 정부와 달리 노무현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요청한 후 주저하다가 파병함으로써 파병의 타이밍을 놓쳤고, 이로 인해 이라크에서의 재건 과정에 참여를 통해 전쟁 특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강석천 칼럼”, 『조선일보』 2006년 2월 3일자).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 규명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¹ 첫째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한국의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미관계를 이전과 같이 ‘우호적 관계’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1950년대 이승만 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 사이의 갈등, 1960년대 말 이후 박정희 정부와 닉

1. 이러한 주장이 증명이 되려면, 한국보다 먼저 군대 파견을 결정한 국가들이 전후 이라크 재건과정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보았는가를 꼼꼼히 규명해 봐야 한다. 스페인의 경우 어떤 경제적 이익을 봤는가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테러와 경제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이라크 파병을 거부한 프랑스나 독일의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늦었다는 점이 한미관계의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후 그 문제가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슨, 그리고 카터 행정부 사이의 갈등은 ‘우호적 관계’로 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1972년의 어느 날 당시 주한미국대사 하비브의 아래와 같은 글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미관계는 평온했던 적이 없었다. 사실, 강한 의견의 불일치나 양자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한 상호간의 의심이 과거 20년간 한미관계의 주요한 면모였다. 이승만은 격렬하게 휴전협정을 반대했고 한국이 통일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기를 원했다. 우리는 그가 공공연히 주장한 북진정책에 대해 두려워했으며, 반대했다. 서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은 처음에는 박정희가 일으킨 1960년(1961년의 오기: 필자)의 쿠데타를 반대했으며, 1963년에는 박이 선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 최고의 압력을 넣었다. 푸에블로호의 피납과 청와대 습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 차이는 박을 격노케 하였다(“미국무성 브리핑 비망록: 한미관계의 폭발: 하비브 대사의 근심”, 1972년 5월 26일, 김영직 편, 2005: 436-438).

둘째로 이 시기에 나타난 한미관계의 갈등이 과연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사실 이 시기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 문제를 고려한다면, 한미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만한 뚜렷한 요인은 북한 핵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이를 반드시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접근으로만 봐야 하는 근거는 없다. 오히려 미국은 부시 행정부 시기의 일방적 대외관계로 인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영국과 일본 등 몇 개 국가에 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대외관계에서의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또 하나 고찰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베트남 파병이었고, 베트남 파병을 통해 한국은 엄청난 전쟁특수를 챙길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박정희 정부 시기 베트남 파병은 타이밍을 잘 맞추어 했기 때문에 베트남으로부터 많은 전쟁특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한국과는 달리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았던 타이

완과 일본의 베트남 전쟁 특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파병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났던 닉슨 행정부와 박정희 정부 사이의 갈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둘러싸고 진행된 사회적 논의들이 이상과 같이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까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비판이 노무현 정부 시기 외교적 문제들을 모두 덮으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본다면, 도대체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와도 관련된 현안이기도 하다.

과연 이라크 파병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가?

II. 뒤바뀐 여론조사

2003년 부시행정부는 한국 정부에 이라크 파병을 요청하였다.² 한국 사회에서는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동시에 한국군의 파병을 반대하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이라크 전쟁 반대 시위는 2002년에 있었던 두 한국인 여중생의 사망사건으로 인해 촉발된 반미 시위의 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로 인해 촉발되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이 있는 직후 『한겨레신문』은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여론 조사에서 57.5%가 파병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한겨레신문』,

2. 부시대통령은 9월 7일 미국민에 대한 연설과 9월 23일 유엔 연설을 통하여 한국을 비롯한 여타 국가들에게 이라크 추가 파병과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부시대통령의 연설 이전에 미국은 이미 9월 4일 한국을 방문 중이었던 리처드 홀리스 미국 방부 부차관보를 통하여 이라크 추가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2003년 9월 22일자). 당시 이라크 전쟁 반대와 파병 반대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57.5%의 반대는 어쩌면 당연하게 예상된 결과였다. 이 여론조사에서 38.2%가 이라크 파병에 대해 찬성하였다.³

다른 매체에서도 여론 조사 결과는 비슷하게 나왔다. KBS의 조사(2003년 9월 21일)에서는 파병반대 60.5%, 찬성 39.3%였고, 『조선일보』(2003년 9월 22일자, 파병반대 54.78%, 찬성 36.9%)와 『중앙일보』(2003년 9월 16일, 파병반대 56.1%, 찬성 35.5%)의 조사 결과도 유사하게 나왔다.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한겨레신문』의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보수적 언론 매체의 여론 조사 결과에서 반대가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은 당시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결국 한국 정부는 2003년 10월 18일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론 조사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음에도 노무현 정부가 파병을 결정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노무현 정부는 한국 전투부대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론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고, 실제 파병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노무현 정부는 “그 동안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 한미관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여론 수렴’이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중앙일보』, 2003년 10월 19일자).

그러나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는 직후에 실시된 9월 22일을 전후한 시기의 여론조사는 여론이 파병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지적한 ‘여론 수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비전투부대로 구성된 공병과 의료지원 부대 중심의 1차 파병 시에도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익’을 내세웠었는데, 전투병 파병 역시 ‘여론’을 무시한 채 결정된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 직전에 나온 2003년 10월 18일 KBS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전투병 파병 찬성 56.3%, 반대 42.3%로 나타났다.⁴ 한

3.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는 지지 15.4%, 반대 80.9%로 압도적으로 이라크 전쟁에 대해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달 만에 여론 조사의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이 여론조사에 근거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여론 수렴’은 잘못된 지적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달 만에 여론 조사 결과가 뒤바뀐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003년 9월 22일부터 10월 18일 사이에 발생한 일들 중 여론 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2003년 10월 16일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라크에서의 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한 ‘결의안 1511’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여론 조사 결과의 변화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유엔의 결의안은 한국군이 국제적 공인 하에 군대를 파병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었다. 유엔은 한국 사회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주어 왔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라는 근거는 1948년 12월 유엔의 한국 정부 승인안에 근거한 것이었고, 한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엔은 유엔한국위원단(UNCOK), 유엔군(UN Forces), 유엔한국재건단(UNKRA),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을 잇따라 파견하였다. 한국 정부의 존립 근거에서부터 국제무대 활약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가장 중요한 명분을 제공해주는 기관이었다. 유엔의 ‘결의안 1511’의 경우 이라크의 대량 살상무기 존재를 인정한 결의안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결의안 — 이는 미국의 이라크 파병 명분과는 다른 것이었다. —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투부대를 파병과 관련된 여론의 변화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2003년 9월의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 파병 반대 의견이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결의가 나올 경우 찬성한다는 견해가 58.9%(『조선일보』)와 58.6%(『중앙일보』)로 더 높게 나왔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겨레 신문』의 9월 18일자 여론조사에서도 보수적인 신문의 조사 결과보다는 낮지만, 유엔이 결의안을 낼 경우 파병에 대한 찬성이 51.0%로 반대(44.3%)보다 더 높게 나왔다.⁵

-
4. 그러나 오무전기 직원 피살사건 이후인 11월 30일 MBC가 조사한 결과는 파병반대 56.8%가 찬성(40.4%)을 크게 앞섰다(주성수, 2007: 40 각주 12).
 5. 흥미로운 점은 유엔의 결의에 의해 파병하는 것은 찬성하면서 다국적 군 형태로의 파견에 대해서는 찬성 32.4%, 반대 61.5%로 반대가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아마도 ‘다국적 군’이 미군의 일부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또 다른 문제는 ‘한미관계’와 ‘국익’에 대한 고려였다. 2003년 9월 22일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를 보면 파병에 반대한 사람이 찬성한 사람보다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57.7%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36.1%)보다 높게 나왔다.

사실 2003년 내내 이라크 파병이 한국의 국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였다. 이는 2003년 시점에서 이미 40년 전인 1964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때에도 논의가 되었던 문제였다. 1953년 이래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해외에서 전쟁을 할 경우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해당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파병은 곧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고,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관계가 악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미 관계를 둘러싼 국익의 문제는 이라크 파병 결정을 둘러싸고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였다.

III. 어떤 관점에서의 국익인가?

1. 전쟁특수에 대한 기대

한국 전투병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전후한 시기 국익의 관점에서 파병 문제를 둘러싼 칼럼과 사설들이 앞다투어 게재되었다. 주요 신문의 사설과 칼럼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정부는 파병 결정이 단순히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게 아니라 분명히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게 급선무다. 이와 관련해 고이

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거액의 대이라크 경제지원 계획을 밝힌 뒤 이는 ‘미국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일본과 해당지역, 그리고 세계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이후” 『국민일보』 2003년 10월 20일자 사설).

② 이미 미국에서는 파병이 한미동맹관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 부수적 효과가 아니더라도 경제규모 12위인 우리가 짊어져야 할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외면할 수 없다. 파병결정이 내려진 이상 최선의 선택은 국론 결집이다(“파병 결정했으면 국론 모아야” 『동아일보』 2003년 10월 20일자 사설).

③ 노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이라크 파병 문제가 주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노 대통령이 파병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을 분명히 개진하는 게 긴요하다. 그래야만 북핵문제를 비롯, 주한미군 재배치,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이라크 특수 참여 등 현안에 대한 실리 외교도 수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병 문제 매듭짓기에 실기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이라크 파병문제 실기해선 안 된다” 『세계일보』 2003년 10월 18일자 사설).

물론 전투부대 파병을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파병 결정 철회가 국익이다” 『한겨레신문』 2003년 10월 25일자 사설; “이라크 파병 결정 성공했다” 『서울신문』 2003년 10월 20일자 사설; “유엔결의가 파병 근거 되나” 『경향신문』 2003년 10월 18일자).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파병이 결정된 이상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위의 사실들에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동맹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익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그 외의 측면에서의 ‘국익’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①에서는 먼저 일본의 파병 결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일본 총리가 ‘일본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세계에 이익’이 된다고 언급한 부분이고, ②에서는 “경제규모 12위인 우리가 짊어져야 할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③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북핵문제를 비롯, 주한미군 재배치,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이라크 특수 참여” 등

이 거론되었다.

이 중에서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재배치의 문제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논외로 한다면, 석유자원 및 이라크 특수 참여 등 경제적 이권의 문제와 함께 ‘일본’ 문제가 주목된다. 이 중에서도 먼저 전쟁 참여로 인한 전쟁 특수의 문제는 ‘국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국 정부는 전투부대의 파병 이전에 공병부대와 의무부대를 파병을 결정하였고, 이 결정을 전후하여 가장 논란이 된 것이 바로 ‘전쟁 특수’의 문제였다. 전쟁 특수 문제는 이라크 전쟁이 종결된 이후 전개될 복구 사업에서 한국이 큰 이익을 올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이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울신문』의 2003년 4월 14일자 사설(“전후 복구사업에 총력대응을”)은 전쟁 특수와 관련된 당시의 여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라크 전쟁의 조기 종결이 임박하면서 세계 각국의 전후 복구 사업 참여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은 이라크 전후복구 사업에 참여할 각국의 대상기업을 선발할 예정인데 필리핀 등 일부 국가들은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수주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파병 결정까지 했으나 전후복구 사업에 대한 대비는 너무 소홀하다. 업계에서는 한국기업들의 참여 기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라크 전후복구 수요는 향후 5년간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필요한 전력 통신 상수도 도로 주택 병원 등의 기초시설 복구에만 적어도 3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국내 업계는 이 가운데 발전 및 송배전시설, 유전 및 정유시설, 통신망 시설 등의 복구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략)

따라서 또 한 차례의 중동특수 기대가 물거품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의 각료급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편성해 현지의 수주활동 지원에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과거 1·2차 중동 특수의 실패 경험을 되살려 보다 현실적인 예측을 토대로 치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에서의 미국의 전쟁에서 이라크 정부군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이라크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전후 복구 문

제가 곧바로 제기된 것이다. 실상 이라크 전쟁은 ‘베트남 전쟁화’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지만, 전쟁 시작된 직후의 상황은 미국에 매우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여론이 대세였다.

2. 베트남의 추억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위의 사설에서 보이는 “또 한 차례의 중동특수”라는 부분이다. 이는 모든 한국인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1970년대의 중동특수를 의미하며, 베트남 전쟁에서의 건설 경험 및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중동 진출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이와 관련하여 2003년 8월 27일 중요한 특집 기사를 마련하였다. “베트남 전 파병 39주년 의미와 과제”라는 제하의 기사에는 ‘월남 특수로 한국경제 기틀 마련’이라는 부제가 붙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베트남주둔사령부가 철군 때까지 송금한 2억 달러 중 40%가 저축됐으며, 사상자 보상금도 72년까지 6500만 달러가 지급됐다.

▶ 물품수송과 세탁소, 유흥업 등 서비스업체가 한때 50여 개 이상, 건설업체가 최대 12개사 공사를 진행하는 등 한국 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미국의 상업적 특혜도 이어졌다. 이처럼 한국이 참전 대가로 얻은 이익은 모두 10억 3,600만 달러로 우리 경제는 ‘베트남 특수’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 이와 함께 베트남전 참전은 한국전쟁 이후 60년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고 국가적 안보를 재점검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실제 전투부대 파병이 결정된 직후부터 이라크 전쟁이 베트남 전쟁에서와 같은 전쟁 특수의 이익을 낼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전투부대 파병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라크 파병이 베트남 전쟁 때와는 달리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어렵고, 초기부터 참전한 영국도 복구사업을 확보하지 못해 영국 내부에서 반발이 크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시민단체 ‘이라

크 파병 경제실리론’ 반박” 『내일신문』 2003년 10월 21일자), 파병에 찬성하는 측의 입장은 이와는 달랐다. 특히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 등 보수 정치인들은 파병이 전쟁 특수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국회 대정부질문: 추가 파병 국익 논란 “기대”와 “수출 우려” 『동아일보』 2003년 10월 21일자).

유흥수(柳興洙·한나라당) 의원은 “이라크 재건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 가까이 된다. 베트남특수 정도는 아니더라도 중동특수 정도는 될 수 있다”며 경제적 국익을 강조한 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파병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홍(朴源弘·한나라당) 의원도 “국익과 한미동맹관계를 고려해 이라크 재건과 민주화를 위해 조건 없이 제때에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자. 재건 비용 부담을 늘린 것도 당연하고 올바른 선택이다”고 말했다.

반면 김경재(金景宰·민주당) 의원은 “이라크 파병으로 14억 인구를 가진 아랍권이 우리나라를 적대시하면 수출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낙연(李洛淵) 심재권(沈載權·이상 민주당) 의원은 “파병도 하고 2억 6,000만 달러의 재건 분담금도 내는 것은 과도한 이중부담이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진보 진영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라크 전쟁 참여가 과거 베트남 파병에서와 같은 전쟁 특수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사회적 담론으로 작동하고 있었다(“해외파병 ‘얻은 것’과 ‘잃은 것’: 국가지위 상승 효과 … 인명피해 땀 후유증” 『동아일보』 2003년 9월 22일자). 특히 1997년의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경제회복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한국 사회에서 이라크 전쟁에의 참전은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며, 동시에 ‘제2의 베트남 특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기대가 압도적인 분위기였다(“경제침체에 돌파구 될 것” 『문화일보』 2003년 10월 21일자; “이라크 파병 盧 대통령 조기결정 배경: 對美관계-국익 고려 전격 결단” 『세계일보』 2003년 10월20일자).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라크에

서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한국 경제에의 기여도 문제는 전혀 검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더욱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돌파구’가 과거에도 있었음을 회상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경제 위기의 돌파구를 여러 번 해외에서 찾았다. 60년대 후반 베트남전쟁, 70년대 오일파동 이후 중동 진출, 90년대 이후 걸프전 등에 따른 해외 진출 및 특수가 그것이다. (중략)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임승차는 용납되지 않으며 스스로 고립을 초래할 뿐이다. 수출과 외국인투자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고립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라크 파병뿐 아니라 비용 분담과 재건 분담금 등 대외 원조 및 국제 협력도 요구된다.

이번 이라크에 대한 추가 파병 결정이 대미 관계 개선과 북핵 위험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할 것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은 40%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미 관계 개선은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안정시키고 투자 유치 및 차입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경제침체에 돌파구 될 것” 『문화일보』 2003년 10월 21일자).

실상 이러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은 한국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바이다.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 파병을 통한 전쟁 특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모두 언급되고 있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 중 하나였다. 실제로 1960년대 중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전쟁특수는 한국이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1970년대 초 군수산업으로부터 출발하여 1973년부터 중화학공업화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2010년까지 사용된 고등학교의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을 보면 베트남 전쟁에 대해 다루면서 모두 전쟁특수 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교과서 6종 중 2종에서만 고엽제 문제를 다루고 있을 뿐이다. 고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2종의 교과서에서도 역시 전쟁 특수 문제는 베트남 전쟁이 한국 현대사에서 미친 중요한 특징으로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⁶ 여기에 더하여 베트남

전쟁에서의 건설 사업의 경험이 1970년대 오일달러에 힘입은 중동에서의 건설 특수로 이어졌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게 서술되고 있다.

2011년에 새로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전쟁 특수 문제와 더불어 더 심각한 사실은 새로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아예 베트남 전쟁 자체에 대한 왜곡이 나타난다는 사실이다(박태균, 2010: 336-337). 『근현대사』 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가 모두 뉴라이트 그룹에 의해 소위 ‘좌편향’ 교과서라고 비판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쟁 특수를 중심으로 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인식은 정치적 스펙트럼을 넘어서 한국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문화적으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표되었던 조성모의 노래 “아시나요”의 뮤직 비디오나 베트남 전쟁 시기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등은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아시나요”에서 한국군은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키러 간 ‘십자군’으로 묘사되고 있는 반면,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해 자체적으로 일어난 게릴라 운동은 ‘사악한’ 공산주의자들로 그려지고 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는 베트남 파병에서 돌아온 용감한 군인의 상을 심어주고 있으며, 베트남에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암시를 받을 수 있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결국 이러한 베트남 파병을 통한 전쟁 특수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은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어렵지 않게 ‘전쟁 특수’의 문제를 또 한 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특정한 방향의 ‘기억’이 외교정책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6. 베트남 전쟁 당시에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는 6종의 교과서 중 하나의 교과서만이 다루고 있다.

IV. 일본의 전쟁특수에 대한 기억

1.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

위의 2장에서 인용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찬성하는 ‘사설’들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일본’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이라크에 파병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군의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다.

한국 정부가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기 전인 2003년 6월 6일 일본은 미일군사협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본 유사’ 대비 3개의 법안을 성립시켰고, 동년 7월 26일 일본 참의원에서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아울러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오는 10월 20~21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앞서 10월17일 일본을 방문기로 한 것은 이라크 파병과 무관치 않은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경향신문』 2003년 9월 15일자).

문제는 한국에서 진보적 정부가 수립되고, 미국의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미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수상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들의 가까운 관계는 한국의 대중매체를 통해 자주 보도되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당시 꺼리고 있었던 미국의 MD 전략에 대해서도 일본은 한국에 비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부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 하루 뒤인 2003년 10월 18일에 이루어졌다는 점 역시 부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자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더욱 촉진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10월 20일부터 21일 사이에 APEC 참석을 위해 방콕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역시 APEC에 참석하여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전투부대 파병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이전인 9월 중순 이미 일본 자위대의 파병 문제에 대한 기사가 한국 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일본도 이라크 파병 문제로 고민 중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일이 자위대원의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커다란 ‘압박’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중략)

미국이 요구하는 자위대원 파견 규모는 1,000여 명, 지원자금 규모는 이라크 재건비용 200억 달러의 10%선인 2,000억 엔(약 2조 원)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달 20~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도자 포럼에 참석하기 직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부시 대통령 방일에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부시 노선을 걸어온 고이즈미 총리는 이미 이라크 파병을 선언했으며 특별보좌관 등 조사단을 이라크에 파견해놓고 있다.

일본 의회는 7월 파병 관련법을 승인했으며 이르면 11월경 1,000명의 자위대 병력이 이라크에 파견될 예정이다(“일본의 파병 문제: 日도 이라크파병 ‘진퇴양난’” 『동아일보』 2003년 9월 14일자).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이 결정된 직후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문제는 더욱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많은 신문들이 일본의 철저한 파병 준비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파병 결정 이틀 후인 2003년 10월 20일 일본의 육상 자위대가 12월 파병된다는 결정이 보도되었다(“일본 육상자위대 12월 파병 — 150명 바스라 북부 파견” 『문화일보』 2003년 10월 20일자).

이러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한국의 신문들은 일본의 파병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 중 아래와 같은 두 개의 기사가 주목된다.

① 시라카와 교수는 갑골문과 금문 연구로 한자 해석에 새 경지를 연 93세의 노(老)석학. 그는 일본이 본래 동양적 질서에 속해 있었음을 강조하고 “일

본인들이 이대로 입다물고 있으면 결국에는 미국의 일개 주(州)가 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 대안으로 “일본은 중국과 더 친해짐으로써 ‘동양’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은 일찌감치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17일 미일정상회담에서는 4년간 50억 달러의 재건비용 지원을 약속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미국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일본과 이라크, 그리고 세계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노리는 실리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와 자위대의 위상 확대다. (중략)

독일 통일의 초석이 된 동방정책의 설계사 에곤 바르. 그는 최근 펴낸 책 ‘독일의 길’에서 반미주의 열풍을 “명청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대신 미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 실리를 챙길 것을 주장했다(“[한마당] 파병의 논리” 『국민일보』 2003년 10월 21일자).

② 일본은 처음부터 명분 따위는 제쳐놓고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이라크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손을 확실히 들어줬었다. 종전 후 파병을 놓고 세계가 고민하는 와중에도 일본은 일찌감치 자위대의 연내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안보리가 이라크 다국적군 결성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하루 전인 지난 15일 대(對)이라크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결의안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미 협조 자세를 보였다.

일본은 오는 12월쯤 육상자위대 비전투부대 150명을 이라크 남부에 선발대로 파견하고 내년 초 약 550명을 추가로 파병할 예정이다. 이라크 재건자금으로는 2004년도에 15억 달러(약 1조 8,000억 원)를 무상지원하고 2005년부터 3년간 3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추가로 지원, 총 50억 달러 이상을 내기로 했다. (중략) 그렇다면 일본은 이라크 협조의 반대급부로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는 지난주 도쿄(東京)를 방문한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그 속내를 드러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라크지원은 미국에 대한 호의 때문이 아니라 일본의 이익, 지역의 이익, 세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또 “미국이 유엔을 더 잘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고 슬쩍 떠뵈으로써 부시대통령으로부터 “늙은 유엔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에 미국의 지지의사를 재삼 확인한 셈이다.

일본은 북핵 및 납북자 문제 해결에서도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다. 미국은 최근 북핵 6자회담에서 일본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북한 측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으로 풀어갈 것이며 새로운 대북안전보장방안도 일본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은 북핵 해결에서 미국으로부터 일본측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보장받았다. 일본은 환율문제에서도 미국의 양보를 얻어냈다. 최근 엔고(高)현상으로, 엔화가 미국 달러화에 비해 갑자기 평가절상됨으로써 수출업체를 비롯, 일본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중략)

일본은 이라크 파병을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으려는 속셈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천문학적 수준으로 추산되는 이라크 전후 복구 및 재건사업을 둘러싸고 한국 등 경쟁국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은 조기파병 결정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계산을 품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군사안보적 역할을 증대하고 역내 경제 협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미국이 측면지원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의 가장 광범위한 군사 활동이 될 이번 이라크 파병이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대테러전 수행을 위한 자위대 파병의 포석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하나의 기우가 되기를 바란다 (“〈지원 전망대〉 日의 이라크 지원 속셈” 『문화일보』 2003년 10월 20일자).

다소 긴 인용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이 두 개의 글을 통해 일본의 이라크 참전에 대해 한국 사회의 경계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두 칼럼은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시기 동북아 지역의 국제질서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가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하면서 일본의 외교, 경제, 군사적인 측면의 실리를 챙기려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북한 문제와 함께 동남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는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보다 더 주목되는 것은 두 개의 칼럼이 실린 『문화일보』와 『국민일보』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면서, 일본의 파병에 대해서는 그 ‘속셈’이 무엇인가에 대해 파헤치는 칼럼을 신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파병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파병 역시 일본 자체의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공정한 평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서로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용문 ②에서 “천문학적 수준으로 추산되는 이라크 전후 복구 및 재건사업을 둘러싸고 한국 등 경쟁국과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이라크에서 발생할 전쟁특수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점은 더욱 주목되는 부분이다.

왜 이렇게 한국과 일본의 파병을 언급하면서 서로 다른 잣대가 가능한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잣대로서의 평가가 한국 사회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2.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에 대한 기억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전쟁 특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다. 일본이 한국전쟁을 통해 전쟁특수를 누렸고, 이것이 일본의 전후 경제부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⁷ 이는 전술한 역사 교과서에서도 거의 대부분 언급하고 있으며,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다(박태균, 2008).

7. 필자가 진행하는 수업에서 학부생들 중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를 모르는 학생은 하나도 없었다. 일본의 전쟁 특수 문제를 어디에서 배웠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약 30%의 학생이 학교에서 배웠다고 답변을 한 반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발간되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전쟁에 대한 책들은 일본의 전쟁특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에서 유일한 승자는 일본이었다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식민지 조선 덕분에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현재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에게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이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전쟁 시기 일본의 전쟁 특수로 이어지는데, 이는 일본이 한국을 이용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대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한국이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동안 일본이 경제부흥에 성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인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로 인식된다는 점이 인터넷 상의 개인 사이트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난 베이비붐.. 단카이세대..역코스.. 한국전쟁특수가.....ㅋㅋㅋ 참 씹쓸혀..우리나라에선 피터지게 싸우는뎡 일본은 부흥부흥..⁸

일본은 <한국전쟁 특수>를 만끽했다. 제2차대전 패전의 초토 위에서,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된 것은 다음 아닌 <한국전쟁 특수>였다.

<김씨왕조>의 시조 김일성의 영똥한 <전쟁통일> 기도로 인해, <우리끼리> <형제자매끼리>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죽이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진 한반도는 초토화됐지만, <한국전쟁 특수>를 누린 일본은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반도를 36년 동안 강점한 일본을 도와준 자는 바로 <전쟁통일>을 획책한 김일성이 아닌가? 김일성이야말로 실질적 친일매국노이자 민족반역자이다.⁹

한국전쟁, 일본에게 신이 내린 선물

전 인류 역사상 타인의 불행으로 완벽하게 행복해진 예는 한국전쟁 외에는 없었다.

그렇다. 일본은 전후 패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악재와 어려움을 한국전쟁 단 한방에 해결하고 현재의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 모든 것에 대한 이득을 취한 나라이다. (중략)

자신들의 치부와 아픔을 우리 한 민족이 모두 갚아 주었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자신들의 행운이라고 믿으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¹⁰

8. <http://twitter.com/#!/happywonnie/status/72300370713513986>. 2011년 6월 6일 검색.

9.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inter:001039&uid=128551. 2011년 6월 6일 검색.

이러한 특수한 기억 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모순이 나타난다. 한국이 베트남 파병을 통해 얻은 전쟁 특수 문제는 베트남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 될까? 만약 베트남인들이 한국의 전쟁특수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평가가 일본이 한국전쟁에서 얻은 전쟁특수에 대한 한국인들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한국 사회는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 것인가?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한국전쟁 특수에 대한 인식이 1960년대 중반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은 1965년부터 베트남에 한국의 전투부대 파병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미국의 한국의 전투병 파병에 대해 특별 원조를 약속했다. 1966년의 브라운 각서는 그 대표적인 예였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군의 비용 및 현지에서 벌어지는 한국군의 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거친 후에 보상한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1966년을 통한 전투부대 파병 이후에도 미국은 계속해서 한국군의 파병을 원했다는 점이다. 존슨 행정부는 미군에 비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한국군을 더 파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심지어 1968년 안보위기가 있던 직후에도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 당시 주한미국 대사였던 포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8년 호놀룰루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존슨 대통령은 한국군의 추가 파병에 대해 문의하였다. 주베트남 미군사령관은 1968년 워싱턴에 보내는 보고를 통해 전쟁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 있으며, 한국군의 추가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 전쟁을 곧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박태균, 2006: 300-301).

당시 한국 정부로서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미국은 이를 ‘알라딘의 램프’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 있는 한국의 전투부대 존재를 무기로 하여 미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한다는 것이었다.¹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들

10. <http://impeter.tistory.com/1102>. 2011년 6월 6일 검색.

11.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additional ROK Troops Contribution to Vietnam,” November 25, 1967,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134,

어주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파병을 둘러싼 협상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협상의 과정에서 흥미로운 언급들이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군대는 한국이 보내고 역외조달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은 일본이 챙기고 있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¹² 실제로 『조선일보』 1965년 5월 3일자와 6월 29일자에는 베트남 전쟁 특수를 일본이 누리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일본이 한국보다 더 이득을 얻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한국의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었다.¹³

이에 브라운 미국 대사는 국무부에 보내는 전문에서 일본이 이득을 본다는 소문이 한국 내에서 돌기 때문에, 한국이 파병 덕분에 많은 경제적 이득을 본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¹⁴ 당시 이후락 대통령 비서실장도 브라운 대사에게 베트남 전쟁에서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은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⁵

실제로 일본의 통상산업성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직접적인 전쟁특수는 1965년 3억 2천만 달러, 1966년 4억 7천만 달러, 1967년 5억 달러, 1968년 5억 9천만 달러, 1969년 6억 4천만 달러, 1970년 6억 6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산술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전쟁 특수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베트남 특수가 있었던 파병국에 대한 수출이나 전시 호경기로 증대된 소비재 수요 조달을 위한 대미수출도 증가함으로써 이로 인한 이득

-
12.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uly 10, 1965,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57.
 13. 1950년대 북송문제, 1970년대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과 문세광 사건, 1980년대 이후 일본의 교과서 문제와 독도문제 등은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비판에 쫓기는 사회적 여론을 일본 관련 문제로 돌리게 하는데 성공적인 계기가 되었다.
 14. Memorandum from the Assistant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Operation Mission to Korea (Brown) to the Director of the 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to Korea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ernstein), "Procurement in Korea for Vietnam," September 23, 1965,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57.
 15. Telegram from the Embassy in Korea to the Department of State, January 5, 1966, *FRUS 1964-1968 Vol. XXIX*, 문서번호 48.

역시 적지 않았다. 일본의 대미 수출은 1965년에 수출 초과로 바뀌었고 이후 1975년까지 대미수출이 연평균 21% 급성장하였다(유용태 외, 2011: 135).

이렇게 일본의 한국전쟁 전쟁 특수에 대한 인식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인들의 한국전쟁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잘 보여준다. 결국 ‘일본의 파병’ 또는 ‘일본의 전쟁특수’라는 변수는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뿐만 아니라 베트남 파병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한국 자체의 역사로부터 파생된 기억에서 뿐만 아니라 불행한 관계의 경험을 갖고 있는 특정한 일본 역사에 대한 기억 역시 파병과 관련된 한국 사회의 담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V.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그리고 만주: 결론을 대신하여

2009년 중반 한국 사회에 또 다른 이슈가 된 것은 아프가니스탄에 한국군을 재파병하는 문제였다. 한국의 한 선교단체가 탈레반에 억류되고 이들 중 한 명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던 한국군을 다시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뒤따랐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일부에서는 탈레반과 약속을 하고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파병을 한다면 탈레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이는 파병된 한국군을 위협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다른 측에서는 한국의 반기문 씨가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증대해야 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도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대중매체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파병을 통해 ‘한국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이 공히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비판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주장을 논리로

내세웠다. 즉, 아프가니스탄은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으며, 이라크와 같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파병이 한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미국이 이라크에서는 철군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군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¹⁶ 1980년 소련의 침공, 그리고 2001년 미국의 개입 등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대체 무엇을 더 얻겠다는 것인가? 이러한 주장은 전쟁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떠나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전쟁에 대한 한국에서의 기억이 한국전쟁에서 시작 된 것이 아니라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역사를 통해 다른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경험이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전쟁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것도 19세기 이전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대륙과 일본으로부터의 침략을 통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한국 역사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전쟁과 관련된 기록이며, 이것이 곧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한국인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1930년대 만주사변과 일본의 만주, 중국으로의 진출은 한국인들에게 전쟁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심어주기 시작했다. 일본 제국의 대륙으로의 확대는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다. 만주는 한국인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곳으로 현재의 한국인들에게 기억되고 있지만, 실상 만주는 한국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곳이다(Park, 2005; “[분수대] 민주웨스턴” 『중앙일보』 2008년 9월 7일자).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출세를 위해 만주를 찾았다. 박정희도, 최규하도 모두 군인과 관료로서의 성장을 통해 식민지하에서의 출세를 도모했다. 경성방직의 김연수를 비롯한 식민지하 자본가들에게도 일본의 대륙 진출은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16. 2012년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으로부터 한국 정부로 이양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보수 세력들이 대거 반대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한미동맹의 문제를 중요하게 거론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Eckert, 1991).

만주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당시 한반도와 만주에 있었던 조선인들의 소설과 수필 등을 통해 잘 나타난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친일 문학으로 알려져 있는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당시 조선인들이 실제로 갖고 있었던 대륙에서의 희망을 담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희망이 좌절된 상태에서의 생활을 담고 있기도 하다(정종현, 2005; 김재용, 2005; 서재길, 2008).

만주가 1910년 직후부터 한국인들에게 독립운동을 위한 중요한 장소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만주가 조선인들에게 전쟁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했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물론 이는 단지 기억으로서만 작동한 것이 아니라 만주의 경험을 신생 대한민국에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시 있었던 ‘기획처’는 만주국의 ‘기획원’을 모방한 것이었으며(조석준, 1967), 5·16 쿠데타 이후 경제개발계획을 총괄하는 기관의 이름을 ‘경제계획원’이 아니라 ‘경제기획원’이라고 했던 것 역시 한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만주에 대한 기억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지 이러한 기억들은 해방 후 ‘친일’ 문제로 인해 겉으로 표출되지 않았을 뿐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기억과 관련하여 박노자의 아래 글은 중요한 의미를 준다.

66년 전, 한반도를 다스렸던 일제는 승산이 없는 중국 본토 침략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전쟁이 “평화”로 불려졌던 오웰(1903~1950)의 명저 「1984년」의 세계나, 이라크 자원의 약탈과 재식민화가 “재건”이나 “민주화”로 불려지는 오늘처럼, 그때 침략도 “지나 사변”으로만 불려졌다. 오늘 “악마 후세인”의 “잔당”이 “용감무쌍”한 미군을 괴롭힌다는 기사가 매체를 메우듯, 그때는 “악마 장개석”의 “하수인”들이 “황군”의 위력에 도전한다고 했다. (중략)

미국이 과거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과 닮은 “세계 신질서”, “중동 질서의 재편”과 같은 과대망상적인 계획의 실천에 착수할 때 우리의 “지도층”은 무엇을 하는가? 66년 전, “전쟁 특수”에 눈이 먼 조선의 예측 자본가들과 그들에게 빌붙은 일군의 글쟁이들은 일제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국 강연”과 “정신 총동원”에 두발 벗고 나섰다. 일본 중심의 아시아 질서가 세워지면 “내지(일본)와 일체가 된 반도의 사회 인사”로서 일본인 밑에서 적어도 중국

인보다는 위인 “준(俊)지배자”, “명에 일본인”으로 군림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라크에서의 “이권 획득”에 눈이 먼 재벌 기업, 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수구·보수 언론, 그리고 미국 중심의 세계 체제에서 미국의 마름으로 행세하고픈 일군의 예측 정치인·관료들의 “파병 필수론”은, 일제 군대에 지원하라고 강요했던 66년 전의 정신적 선조들의 추대와 과연 다른가? 주인에게 충성을 앞다투어 과시하려는 꼴불견의 노예 기질과 젊은이들의 목숨을 파리목숨보다 가볍게 보는 인권 불감증의 풍토는 달라지지 않았다.

제국주의에 대한 부역이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의 비극 중의 하나이다. 66년 전에 난징과 상하이의 “황군 진주”를 축하했던 예측 일간지들이 지금은 “민족지”를 자칭하고 있고, 베트남 파병이라는 대형 범죄에 관여했던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공범들은 오늘 “국정의 원로”를 자칭한다. 그러한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 오늘의 “황국 신민”의 입에서 “무조건적 파병”과 같은 망언들이 거침없이 나온다(“[박노자 칼럼] 데자뷔, 어디서 본 듯한 맹종” 『한겨레신문』 2003년 10월 13일자).

박노자의 인식은 만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만, 어쩌면 그 시작은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지도 모른다. “전쟁은 이익을 가져다준다.” “두 전쟁이 없었다면 일본은 제국이 될 수 없었고, 조선은 제국의 일부가 될 수 없었다”는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지나친 것일까?

전쟁을 통해 재생되는 기억들은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전쟁과 파병의 악순환을 겪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즉,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의 파병과 관여를 통해 경제 부흥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와 아이티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 약소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어쩌면 아시아에서 나타났던 특수한 기억 위에서의 악순환 때문일 수도 있다(“방글라데시, 유엔평화유지군 최대 파견국” 『연합뉴스』 2006년 9월 6일; “수단 인종청소 방관한 유엔평화군” 『경향신문』 2011년 6월 6일자).

방글라데시나 네팔, 말레이시아 등이 유엔의 평화유지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유엔의 요청에 의해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것

이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성된 기억을 자국 내에서 다시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엽제 피해, 한국전쟁 기간 중 일본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빨갱이 사냥(red purge), 민주와 한반도, 그리고 베트남에서 민간인들이 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 등에 대한 기억을 객관적으로 재생해 내는 것은 전쟁 특수에 대한 특정한 기억만을 재생시키는 것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만이 ‘국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21세기는 ‘국가 브랜드’와 일 국가의 ‘소프트 파워’가 강조되면서 보이지 않는 국가의 이미지가 경제적 이익보다도 장·단기적으로 더 중요한 국익을 형성할 수 있는 시기라는 사실 역시 전쟁특수에 대한 특수한 기억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영직 편. 2005. 『자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 김재용. 2005. 「내선일체의 연장우로서의 만주국 인식」. 『한국근대문학연구』 제6권 제1호 pp. 308-325.
- 박태균.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분석」. 『역사교육』 116집. pp. 315-345.
- 박태균. 2008.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전쟁: 일본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17권 3호 pp. 27-49.
- 박태균. 2006. 「베트남 파병을 둘러싼 한미 협상 과정」. 『역사비평』 74호 pp. 144-189.
- 서재길. 2008.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어 방송」. 『한국문학연구』 제33집. pp. 179-212.
- 유용태·박진우·박태균. 2011.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창비.
- 정종현. 2005.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28권. pp. 53-94.
- 조석준. 1967. 「기획」. 이한빈 편. 『한국행정의 역사적 분석 1948~1967』. 한국행정문제연구소. pp. 408-418.
- 주성수. 2007. 『한국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아르케.
- Eckert, Carter J. 1991. *Offspring of Empire: 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Department of State. 2000.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64-1968 Vol. XXIX, Part I: Korea*.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ark, Hyun Ok. 2005. *Two Dreams in One Bed*. NC: Duke University Press.

Memory of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and the Vicious Circle of Entering into Wars

Park, Tae Gyun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3, the ROK government decided to send combat troops to Iraq. At the time, the ongoing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the dispatch of combat troops was very negative not only because of the prevalent criticism that the war could not be legitimized but also in the South Korean civil society. However, a public opinion taken shortly after the government's decision to enter the war on October 18, 2003, showed that over 50% of the respondents supported the government's decision. This was a starkly different from the public opinion just one month ago.

What triggered the change was the passing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on the Iraqi democratization. Other factors included the social discourse on 'national interest', which was closely related to the Korea-US security alliance and the special procurement that was expected resulting from the Iraqi War. These factors were operating within the social consensus. In particular, the memory of the special procurement from the Vietnam War was affecting the public consensus.

At the same time, there was another memory concerning special procurement that Japan benefited from, during the Korean War became currency subject of interest in Korean society in 2003. The Japanese government's decision to send the Self Defense Forces to Iraq and to spare financial support to the Bush Administration revived the memory. In fact, the memory on Japanese special procurement during the Korean War had emerged in the mid 1960s when the ROK government consulted with the Johnson Administration about the special procurement from the Vietnam War.

In sum, the memory of the special procurement of wars brought about the vicious circle of entering into wars in East Asian countries. This type of memory may have been formed due to the special economic benefit from the 1931 Manchurian War, which occurred exactly 80 years ago.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llect the forgotten memories on the very negative effects of wars.

Key Words: Memory of a war, Iraqi War, Vietnam War, Korean War, Japanese War in Manchuria, Roh Mu Hyun Government, Special procurement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Tel_02 880 8519
Email_tgpark@snu.ac.kr

